

60차 참여사회포럼(대화#4)

---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의 저자  
손낙구 씨와의 대화

---

일시 | 2010년 4월 23일(금) 오후 4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에서 말하려는 것

손낙구

- |    |   |
|----|---|
| 차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도권 정치사회 지도에서 말하려는 것</li> <li>2. 비수도권은 어떨까</li> </ol> |
|----|---|

## 1. 수도권 정치사회 지도에서 말하려는 것

### 한국사회는 '부동산'이 결정한다

누군가 나에게 한국 사회의 이러저러한 양상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단호히 '부동산'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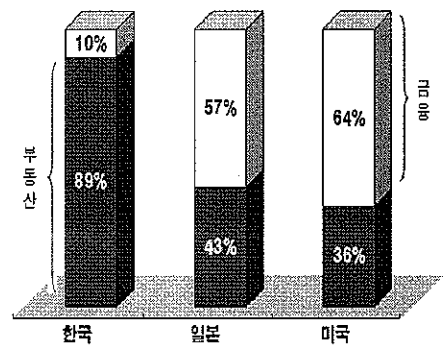
한국에서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는 부동산 자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아파트에 사는지 연립주택에 사는지, 아파트에 산다 해도 어느 브랜드의 몇 평에 사는지, 주택 말고 땅이나 건물이 있는지 등 몇 가지 정보만 알아도 그 사람의 생활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 어떤 정치의식을 갖고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부동산은, 주거 환경은 물론이거니와 개인 삶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누가 어느 대학에 가느냐의 문제 역시 부모의 부동산이 결정한다. 부모의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은 뚜렷이 높다. 은행 문턱의 높이도 부동산이 올리고 내린다.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대출 여부와 그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인간의 수명까지 관여한다. 부동산을 소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부동산을 소유한 계층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소유하는지에 따라 평균수명의 통계적 차이는 매우 분명하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대개 부동산에 눈을 돌린다. 여윌 돈을 부동산이 아닌 데 투자한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곤 한다. 부정부패나 뇌물 사건도 대부분 부동산 때문에 일어난다. 언론의 논조도 잘 들여다보면 부동산 광고 수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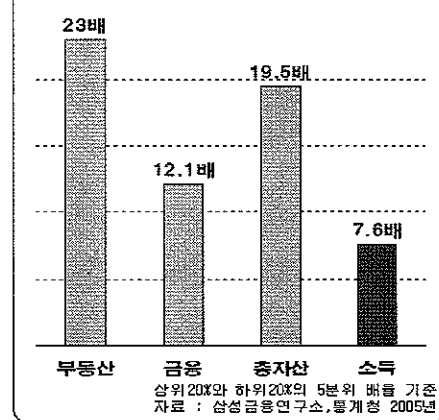
부동산에 울고 부동산에 웃는 나라, 직업과 노동 소득보다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소득이 불평등의 잣대가 되는 사회, 대한민국은 부동산 계급사회다.

한미일 가계자산의 구성



주: 1) 한국은 2006년, 일본과 미국은 2003년 기준  
 자료: 대한상의, 미국 FRB, 일본 내각부(이일 통계는 삼성금융연구소, '금융브리프', 2006.2에서 재인용)

부유층과 극빈층의 자산 소득 격차



상위 20%와 하위 5%의 5분위 배율 기준  
 자료: 삼성금융연구소, 통계청 2005년

내가 사는 동네는 성동구 마장동이다. 나는 오늘도 이곳에서 가족이란 뚝단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가르며 쉴 새 없이 노를 젓고 있다.

인간이 가족을 만들고 가족이 동네를 만든다. 마장동은 성동구를 만들고 성동구는 서울시를, 서울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만들며 나라가 대륙을, 대륙이 지구를, 지구가 태양계를, 태양계가 결국 우주를 만들어 낸다. 동네는 나와 가족을 우주와 연결하는 작은 동심원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사는 동네를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동네 속으로 들어갔더니... '강남 속 강북'이 보였다**

강남 중 강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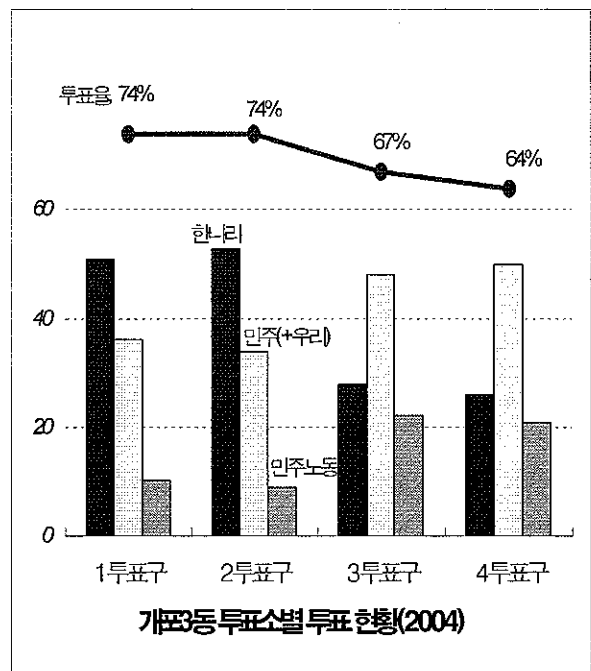
	주택 소유	아파트	1인 가구	연건평 19평 이하	대학 이상 학력	종교 신자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2008년 총선	
							투표율	한나라당 지지	투표율	한나라당 지지	투표율	한나라당 지지
압구정1동	73	75	14	4	88	67	65	70	57	85	46	64
압구정2동	74	78	19	10	86	65	61	68	53	84	43	64
대치1동	88	97	3	5	92	65	72	64	61	82	51	56
대치2동	87	100	3	0	89	66	71	63	62	81	49	57
도곡동	78	85	14	14	89	64	67	67	58	83	46	60
청담동	70	71	45	12	81	63	63	61	52	80	44	58
일원본동	76	90	9	35	81	62	70	52	59	71	49	47
평균	78	85	15	11	87	65	67	64	57	81	47	58

강남 속 강북

	주택소유	아파트	1인 가구	연건평 19평 이하	대학 이상 학력	종교 신자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2008년 총선	
							투표율	한나라당 지지	투표율	한나라당 지지	투표율	한나라당 지지
역삼동	20	6	55	26	70	49	49	41	33	64	25	45
논현동	25	10	48	23	63	53	46	44	33	67	26	49
대치4동	26	17	45	53	73	54	54	43	40	68	33	46
일원1동	26	46	18	74	51	62	60	39	49	59	44	39
수서동	28	90	24	85	48	59	60	39	49	57	45	42
평균	25	34	38	52	61	55	54	41	41	63	35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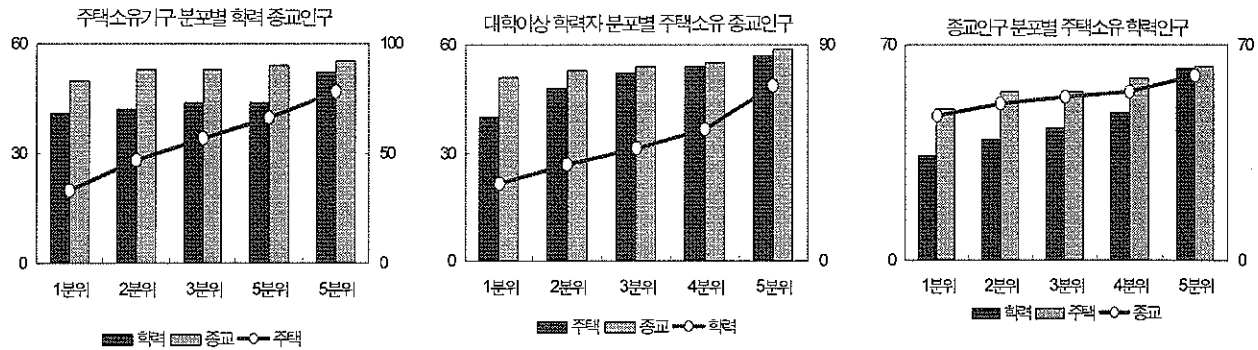
**'강남 좌파'의 실체를 본 걸까?**

개포3동 1,2투표구는 74%가 투표해 한나라당에 51%와 53%를 몰아줬다. 3,4투표구는 투표율이 7~10%가 낮고 민주(+우리)당이 48%와 50%를 얻어 가장 높다. 개포3동 평균 13%인 민주노동당 득표율은 1,2투표구에서 10%와 9%에 그친 반면 3,4투표구에서는 무려 22%와 21%다. 3,4투표구에서 한나라당은 민주(+우리)당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민주노동당과 비슷한 20%대밖에 얻지 못했다. 강남에서 진보정당이나 민주당을 많이 찍는 '강남좌파'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



## 부동산 - 학력 - 종교가 사이 좋게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수도권에서는 부동산-학력-종교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부동산이 부를 대표하는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부동산과 학력이 나란히 같은 길을 걷는 건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종교의 길도 같다는 건 슬픈 일이다. 가난할수록 절대자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 동네와 선거 사이에 법칙이 보였다

첫째, 동네별 특성과 투표율의 관계에 관한 법칙이다. 투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집 가진 사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 대학 이상 학력자,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많이 산다. 대신 1인 가구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적다. 반면에 투표율이 낮은 동네일수록 무주택자,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 1인 가구, (반)지하 거주자, 종교 없는 사람이 많이 산다. 대신 대학 이상 학력자와 다주택자는 적다. 또 투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한나라당 득표율이 높고, 민주(+우리)당 득표율은 낮다. 뿐만 아니라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집 가진 사람, 다주택자, 대학 이상 학력자, 종교 인구 등이 많은 동네일수록 투표율이 높고, 그 반대의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투표율 분포별 동네의 특성 (2004, 수도권)	평균			5분위									
	계	평균 미만	평균 이상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164개 동네	592개 동네	572개 동네	하위50개 동네	하위100개 동네	하위 20%				상위 20%	상위100개 동네	상위50개 동네	
투표율	60	55	64	48	50	52	57	60	63	68	70	71	
주택 소유	주택 소유	56	50	62	39	45	48	52	52	59	69	74	79
	다주택	7	5	8	4	4	5	6	6	7	10	11	13
	무주택	44	50	38	61	55	52	48	48	41	31	26	21

동네 특성별 투표율 분포 (2004, 수도권)	음연동 수(개)			투표율(%)		5분위별 투표율(%)				
	계	평균 미만	평균 이상	평균 미만	평균 이상	1분위 (하위20%)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상위20%)
주택 소유 가구	1,164	547	617	58	62	56	58	60	61	65
다주택(주택 소유 평균 이상 동네)	617	170	447	57	63	56	59	62	64	67
다주택(주택 소유 평균 미만 동네)	547	296	251	56	59	55	56	57	59	61

둘째, 동네별 특성과 한나라당 득표율의 관계에 관한 법칙이다. 한나라당을 많이 찍은 동네일수록 집

가진 사람,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 대학 이상 학력자,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많이 산다. 1인 가구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적게 산다. 한나라당 득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투표율도 높다. 역시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한나라당 득표율 분포별 동네의 특성 (2004, 수도권)	평균			5분위									
	계	평균 미만	평균 이상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164개 동네	632개 동네	532개 동네	하위50개 동네	하위100개 동네	하위 20%				상위 20%	상위100개 동네	상위50개 동네	
득표율	36	32	42	28	28	29	33	36	39	48	54	57	
주택 소유	주택 소유	56	53	61	39	44	49	53	58	58	65	69	72
	다주택	7	6	8	4	4	5	6	7	7	9	11	12
	무주택	44	47	39	61	56	51	47	42	42	35	31	28

동네 특성별 한나라당 득표율 분포 (2004, 수도권)	읍면동 수(개)			득표율(%)		5분위별 득표율(%)				
	계	평균 미만	평균 이상	평균 미만	평균 이상	1분위 (하위20%)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상위20%)
주택 소유 가구	1,164	547	617	34	38	33	35	35	37	41
다주택(주택 소유 평균 이상 동네)	617	170	447	34	39	34	35	36	38	45
다주택(주택 소유 평균 미만 동네)	547	296	251	33	36	31	33	34	34	37

셋째, 동네별 특성과 민주(+열린우리)당 득표율의 관계에 관한 법칙이다. 민주(+열린우리)당 득표율이 높은 동네일수록 무주택자,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 1인 가구, (반)지하 거주자, 종교 없는 사람이 많이 산다. 대신 대학 이상 학력자와 다주택자는 적게 산다. 또 민주(+열린우리)당을 많이 찍은 동네일수록 투표장에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민주(+우리)당 득표율 분포별 동네의 특성 (2004, 수도권)	평균			5분위									
	계	평균 미만	평균 이상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164개 동네	560개 동네	604개 동네	하위50개 동네	하위100개 동네	하위 20%				상위 20%	상위100개 동네	상위50개 동네	
득표율	46	41	49	31	34	38	43	46	48	51	53	54	
주택 소유	주택 소유	56	62	51	73	69	67	61	57	53	47	44	38
	다주택	7	8	6	12	10	9	8	7	6	5	4	4
	무주택	44	38	49	27	31	33	39	43	47	53	56	62

동네 특성별 민주(+우리)당 득표율 분포 (2004, 수도권)	읍면동 수(개)			득표율(%)		5분위별 득표율(%)				
	계	평균 미만	평균 이상	평균 미만	평균 이상	1분위 (하위20%)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상위20%)
주택 소유 가구	1,164	547	617	48	44	49	47	46	45	42
다주택(주택 소유 평균 이상 동네)	617	170	447	47	43	47	46	45	44	39
다주택(주택 소유 평균 미만 동네)	547	296	251	49	46	50	49	48	47	45

넷째, 민주노동당 또는 진보신당은 동네별 특성과 지지율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그만큼 한국에서 진보 정당은 자신만의 사회적 기반을 갖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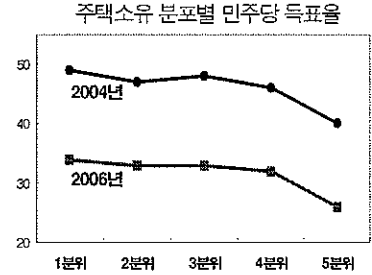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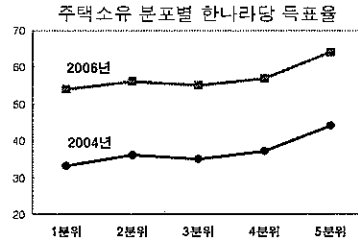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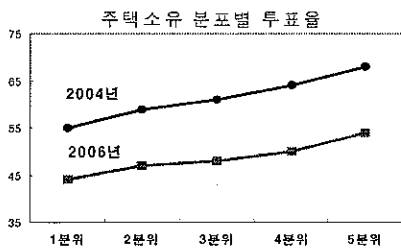
민주노동당 득표율 분포별 동네의 특성 (2004, 수도권)	평균			5분위									
	계	평균 미만	평균 이상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하위50개 동네	하위100개 동네	하위 20%				상위 20%	상위100개 동네	상위50개 동네	
평균 득표율	13	11	15	7	8	9	12	13	14	17	18	19	
주택 소유	주택 소유	56	55	56	73	72	62	53	53	56	57	58	56
	다주택	7	7	7	11	11	8	6	6	7	7	7	6
	무주택	44	45	44	27	28	38	47	47	44	43	42	44

동네 특성별 민주노동당 득표율 분포 (2004, 수도권)	읍면동 수(개)			득표율(%)		5분위별 득표율(%)				
	계	평균 미만	평균 이상	평균 미만	평균 이상	1분위 (하위 20%)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상위 20%)
주택 소유 가구	1,164	547	617	14	13	13	13	14	14	13
다주택(주택 소유 평균 이상 동네)	617	170	447	14	13	14	14	14	14	12
다주택(주택 소유 평균 미만 동네)	547	296	251	13	14	14	13	13	14	13

### 선거 때마다 다른 건 아닐까

서울	이유	투표율	한나라당	민주(+우리)당	민주노동당
2004년 총선	노대통령 탄핵	62%	37%	46%	13%
2006년 지방선거	참여정부 실정	49%	58%	31%	10%

그래서 주택소유 가구 분포별 2004년과 2006년 서울 선거를 비교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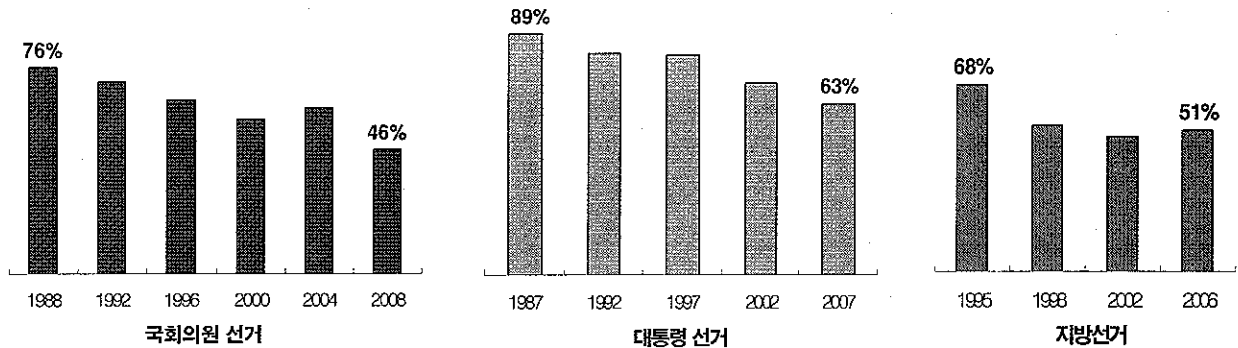


### 정당을 생각한다

- 어느 정당이 가장 잘 소통하고 있나 : 한나라당이다. 자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부자들과 중상층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더 잘 불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 어느 정당이 가장 지지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나 : 민주당이다.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중하층이나 서민들을 투표장에 불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진보 정당들은 어떤가 : 아직 정당으로 인정 못 받고 있다. 어느 계층으로부터도 뚜렷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 투표율을 생각한다

### ① 민주주의 위기의 지표, 투표율 추락



② 우리나라 투표패턴을 설명해왔던 개념들 - 촌고도저(村高都低), 여촌야도'(與村野都), 계급배판투표 - 은 여전히 유효한가

### ③ 가난한 사람들은 왜 투표하지 않는 걸까

동네와 선거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내내 걸렸던 대상은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었다. 투표율이 낮은 동네는 주로 집 없이 셋방을 떠도는 사람이 많은 곳,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곳, 1인 가구나 (반)저가 거주자가 많은 곳,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적게 사는 곳, 대학 이상 학력자가 적은 곳,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은 곳이다. 물론 이 동네에서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을 선택한 사람이 많은 점을 볼 때 만약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이들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동네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투표를 포기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까.

나라별로는 의무 투표 또는 책임 투표제를 도입해 투표를 국민의 의무로 정한 곳도 있지만, 거꾸로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가 대부분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가 캠페인을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벌이는 나라도 드물다. 선관위가 시·군·구마다 별도의 예산과 인원을 갖춘 상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며, 대법관 출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관위 조직이 있는 경우는 유례가 없다. 선거 관련 제도로만 보면 오늘날과 같이 다수가 투표하지 않는 낮은 투표율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투표를 하는 것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방안도 더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부동산 문제가 악화된 탓에 국민들이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닌다는 점이다. 전체 국민 기준으로는 55%, 셋방 사는 국민 기준으로는 80%가 한 집에 5년 이상 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셋방 사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 2년에 한 번씩 떠돌며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지만, 투표 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 현재 살고 있는 동네는 ‘우리 동네’가 아니라 곧 떠나야 할 곳일 뿐이다. 안정된 동네가 사라지고 정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동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투표율이 오르는 것은 어렵다. 특히 셋방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표장에 가야 할 이유가 더 약할 수밖에 없다.

가구별 거주기간 (2000-2005, 단위 : %)

		2000년				2005년			
		2년 미만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	2년 미만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
전국	계	34	53	22	25	30	55	19	26
	자가	15	32	26	42	14	36	22	41
	셋방	58	79	17	4	52	80	14	6
수도권	계	40	60	23	17	35	65	19	17
	자가	20	41	29	30	18	49	23	27
	셋방	59	80	17	3	54	82	13	5
서울	계	41	61	22	17	35	65	19	16
	자가	19	38	27	35	18	49	23	28
	셋방	57	78	18	4	50	79	15	6
인천	계	35	56	26	18	32	59	20	20
	자가	19	40	33	27	16	44	26	30
	셋방	60	80	17	3	58	83	12	5
경기	계	40	62	23	15	36	66	18	16
	자가	22	44	30	26	18	51	23	26
	셋방	61	82	15	3	57	85	11	4
비수도권	계	29	47	22	32	26	46	20	34
	자가	11	26	25	49	11	27	22	51
	셋방	56	79	17	4	51	78	15	7

둘째, 어느 정당도 집 없이 셋방에 살거나, 혼자 살거나, 심지어 (반)지하나 비닐집에 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결국 이들이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흔한 말로 ‘그놈이 그놈인데 뭣 하러 투표를 하나’는 정서인 것이다. 문제는 계급 배반 투표가 아니라 투표할 이유 자체를 만들어 주지 못하는 정치에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를 할 경우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 이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픈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 2. 비수도권은 어떨까

### 수도권 1,164개 동네별 특성과 투표 패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수도권 동네별 특성과 투표율-정당별 득표율의 상관관계

		주택소유 가구	다주택가구	아파트 거주가구	1인가구	(반)지하등 거주가구	대학이상 학력자	종교인구	투표율
서울	투표율	●	●	●	●	●	●	●	
	한나라	▲	●	●	▲	●	●	●	●
	민주당	●	●	●	●	●	●	●	●
	민노당								
경기	투표율	●	●	▲	●	●	▲	●	
	한나라	▲	●	▲	▲	▲	▲	●	●
	민주당	●	●	▲		▲	▲	●	●
	민노당			▲					
인천	투표율	●	●	▲	●	●	▲	●	
	한나라	▲			▲	▲	▲	●	●
	민주당	▲				●		●	●
	민노당							▲	
수도권	투표율	●	●	●	▲	●	●	●	
	한나라	●	●	▲		●	▲	●	●
	민주당	●	●	●	▲	●	▲	●	●
	민노당	▲							

●는 상관관계가 뚜렷함을, ▲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제한적임을, 공백은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함

### 비수도권 2,387개 동네별 특성과 투표 패턴 분석 결과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비수도권 읍면동별 특성과 투표 패턴 간의 상관관계를 수도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영남권

- 투표율과 주택소유율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투표율과 다주택자 비율, 투표율과 종교인구 비율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나머지 동네의 특성과는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 한나라당 득표율과 아파트 거주자 비중, 1인가구 비중에서 일부 상관관계가 보이나 제한적이며, 동네의 다른 특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 민주(+우리)당 득표율 역시 아파트 거주자 비중, 1인가구 비중에서 일부 상관관계가 보이나 제한적이며, 동네의 다른 특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 민주노동당 득표율은 아파트 거주 가구와 1인가구 비중에서 상관관계가 뚜렷하다. 동네의 다른 특성과

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권역별 동네의 특성과 투표 패턴 분석 결과

		주택소유 가구	다주택가구	아파트 거주가구	1인가구	(반)지하등 거주가구	대학이상 학력자	종교인구	투표율
수도권	투표율	●	●	●	▲	●	●	●	
	한나라	●	●	▲		●	▲	●	●
	민주당	●	●	●	▲	●	▲	●	●
	민노당	▲							
영남권	투표율	●	▲					▲	
	한나라			▲	▲				
	민주당			▲	▲				
	민노당			●	●				
호남권	투표율	●							
	한나라								
	민주당								
	민노당	●			▲		●		
충청권	투표율	●						▲	
	한나라			▲					
	민주당								
	민노당	●		●			●		
	자민련								

● 는 상관관계가 뚜렷함을, ▲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제한적임을, 공백은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함.

② 호남권

- 투표율과 주택소유율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 동네의 나머지 특성과 투표율의 상관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 한나라당 득표율(평균 3%)과 동네별 특성의 상관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 민주(+우리)당 득표율(평균 81%)과 동네별 특성의 상관관계도 확인하기 어렵다.
- 민주노동당 득표율(평균 12%)은 주택소유율과 대학이상 학력자 비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1인가구 비중과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나머지 동네의 특성과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③ 충청권

- 투표율과 주택소유율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종교인구 비중과도 제한적이거나 일정한 상관관계가 보인다. 나머지 동네의 특성과는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 한나라당 득표율(평균 25%)과 아파트 거주자 비중은 상관관계가 일부 보이나 미약하며, 나머지 동네의 특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 민주(+우리)당 득표율(평균 44%)과 동네별 특성의 상관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 민주노동당 득표율(평균 12%)은 주택소유율과 아파트 거주자 비중, 대학이상 학력자 비중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나머지 동네의 특성과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 자면련은 2004년 총선 때 충청권에서 평균 16%를 얻었으나 동네별 특성과는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 비수도권 분석에서 생각해볼 문제

- 동네별 특성과 투표 패턴의 상관관계 양상이 수도권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이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거환경의 차이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 자체가 수도권과 큰 차이가 나며(수도권 집 한 채 값 비수도권의 3.5배),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93%가 수도권 거주), 1인가구의 성격이 수도권과 차이가 크다. 또 호남권 한나라당 평균 득표율이 3%에 불과한 데서 보듯 '지역' 변수도 수도권과는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비수도권 분석에서는 비수도권의 조건과 처지에 맞는 설명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서 주목되는 점은 투표율과 주택소유율과의 높은 상관관계다. 동네 가구 중 집을 소유한 가구가 많을수록 투표율이 높고, 무주택자가 많을수록 투표를 하지 않는 현상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영남, 호남, 충청을 가릴 것 없이 똑같다. 적어도 누가 투표하며 누가 투표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동네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노동당과 동네별 특성의 상관관계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좀 더 유효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도 관심거리다.

※ 다만 권역별로 인구나 유권자수 비중에 차이가 크고, 투표율과 정당별 득표율도 다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인구나 선거권자수(분석대상 3,537개 읍면동 기준, 단위 : 명)

	전국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기타(강원,제주)
인구	46,291,629	22,138,513	12,541,918	4,901,521	4,718,221	1,991,456
(%)	(100)	(48)	(27)	(11)	(10)	(4)
선거권자	34,423,652	16,411,955	9,415,291	3,699,017	3,411,529	1,485,860
(%)	(100)	(48)	(27)	(11)	(10)	(4)

권역별 투표율과 정당별 득표율(분석대상 3,537개 읍면동 기준, 단위 : %)

	투표율	한나라당	민주+우리당	민주노동	기타
전국	60	36	45	13	6
수도권	60	36	46	13	5
영남권	61	53	30	14	4
호남권	61	3	81	12	4
충청권	57	25	44	12	19
기타	59	39	44	13	5

### 전국 3,537개 읍면동별 특성과 투표 패턴 분석 결과

- 전국적으로 투표율과 주택소유율과의 상관관계는 뚜렷하다. 집 없는 사람이 많이 살수록 투표하지 않는다는 분석은 수도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통 털어 전국 3,537개 동네 분석에서 투표율과 주택소유율과의 상관관계 못지않게 주목되는 게 투표율과 종교인구의 높은 상관관계다. 이 점은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전국 3,537개 동네 분석에서 투표율과 한나라당 및 민주(+우리)당 득표율의 상관관계도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 민주노동당은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과 상관관계가 높고, 1인가구 비율과 대학이상 학력자 비율과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 전국 3,537개 읍면동별의 특성과 투표 패턴 분석 결과

		주택소유 가구	다주택가구	아파트 거주가구	1인가구	(반)지하등 거주가구	대학이상 학력자	종교인구	투표율
전 국 (3,537)	투표율	●						●	
	한나라							●	▲
	민주당							●	▲
	민노당			●	▲		▲		
동 (2,129)	투표율	●	●	●	●		●	●	
	한나라	▲	●					●	▲
	민주당	▲	●					●	▲
	민노당	▲			▲			▲	

● 는 상관관계가 뚜렷함을, ▲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제한적임을, 공백은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함.

※ 전국 3,573개 읍면동(2005 기준) 가운데 분석이 어려운 36개 읍면동 제외 / 강원도와 제주가 포함됨.

### 도시지역(洞) 동네별 특성과 투표 패턴 분석 결과

- 투표율과 동네별 특성 간에는 주택소유율, 다주택자비율, 아파트 거주자 비율, 대학이상 학력자와 종교인구 비율 모두 상관관계가 뚜렷하다. 정당별 득표율은 한나라당과 민주(+우리)당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민주노동당은 미약하다.
- 한나라당 득표율과 주택소유율 간에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다주택자 비율, 종교인구 비율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다. 한나라당 득표율과 동네의 다른 특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 민주(+우리)당 득표율과 주택 소유율 간에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다주택자 비율, 종교인구 비율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다. 민주(+우리)당 득표율과 동네의 다른 특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 민주노동당 득표율과 동네의 특성과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다만 주택소유율, 1인가구, 중

교인구 비중과 미약하나마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 도시지역인 동에는 인구나 유권자의 80% 정도가 살고 있다.

동과 읍면의 인구나 선거권자수(단위 : 명)

	읍면동	동	읍면
읍면동수 (%)	3,537 (100)	2,129 (60)	1,408 (40)
인구 (%)	46,291,629 (100)	37,601,768 (81)	8,689,861 (19)
선거권자 (%)	34,423,652 (100)	27,324,874 (79)	7,098,778 (21)

동과 읍면의 투표율과 정당별 득표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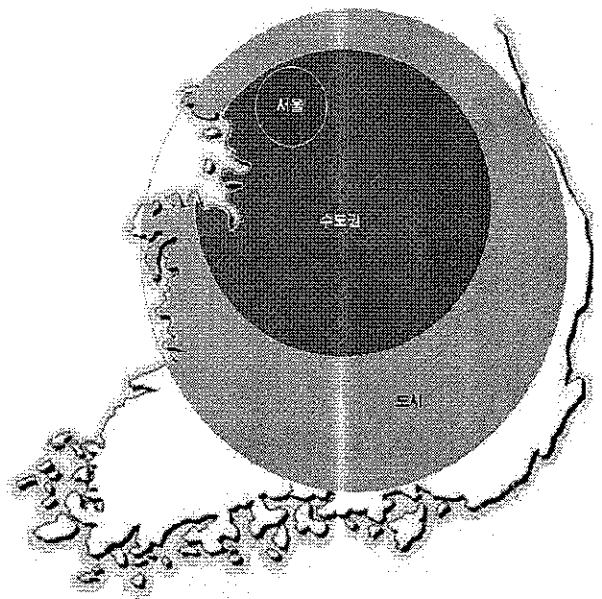
	투표율	한나라당	민주(+우리)당	민주노동당	기타
읍면동	60	36	45	13	6
동	60	37	44	14	5
읍면	60	33	46	11	9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수도권편>은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는 걸까**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핵이다. 서울은 그 가운데서도 중핵이다. 서울이 시빨간 색이라면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은 주황색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동네별 특성과 투표 패턴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는 전체 인구나 유권자의 80%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서도 빨간색이 조금씩 연해지지만 여전히 빨간 색조를 유지하듯 유사한 특성이 나타난다. 수도권에서 보이는 동네별 특성과 투표 행태간의 상관관계는 대한민국을 최소한 3분의 2에서 4분의 3까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으로 계급을 이루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비중이 정치와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그 정도의 무게를 갖는단 얘기가 아닐까. 부동산 계급사회의 부동산 비만증이 합병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수도권 정치사회 지도의 ‘설명력’







## 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참여사회연구소 02-764-9581 [blog.peoplepower21.org/research](http://blog.peoplepower21.org/research)